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 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

목 차

1. 서론
2. 북한의 국력
3. 북한 군사력의 평가
 - 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
 - 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 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
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작권통제권 전환
 - 가. 동북아 안보환경
 - 나. 전작권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
5. 결론

1. 서론

-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원인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는 연구대상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변화와 변동이 전쟁이라는 대개를 통해 일어난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따라서 변화와 변동 이후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세력과 기존의 상황 속에서 유리한 국면을 지키려는 세력의 복합적 관계를 속에서 전쟁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현실인식의 창(窓)이 됨.
- 주로 현실주의적 전통에 따르는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전쟁을 야기하는 주요한 변수는 각국의 힘, 즉 국력(national power)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가 공감.
 - 물론 힘 이외에도 현상(status quo)에 대한 만족도 및 전쟁에서 입을 피해와 이익에 대한 타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쟁이 발생하게 됨.
-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차원보다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통해 북한의 공격력과 공격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무기 효능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과연 북한의 군사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국력은 전쟁을 일으킬 수준에 있는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
- 국가차원 또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 남한은 상시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
 -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후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들이 존재함.
 - 북한 역시 이른바 ‘피포위(under siege)’ 의식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해 상시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의 한 대안으로서 전작권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재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전작권의 연기가 안보 확실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전작권 재연기가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MD체제 구축과 외교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2. 북한의 국력

- <표 1>에서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함.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저하와 마찬가지로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

〈표 1〉 냉전시기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1957~ 1961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성장률(%)	20.9	9.8	5.5	10.4	4.1	3.7	1.4

자료: 1985년까지는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PO, 1988); 1986~1990년은 『남북한경제지표』(통일원, 1993)

- 한국의 경제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1989년부터 남북한의 경제력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됨.
- 이로써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우세를 보여 온 북한의 대남 경제발전의 동력은 사라지고 이후 남한과의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2〉 탈냉전시기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성장률(%)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률(%)	1.2	1.8	2.2	3.8	-1.1	-2.3	3.7	-0.9	-0.5	0.8	1.3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 년도 참조

- 탈냉전 시기에 들어 북한의 경제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는 등 파국의 양상을 보임.

**한국의 경제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1989년부터
남북한의 경제력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됨**

북한의 국력은**1980년대 이후**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게 존재

- 국제사회주의의 붕괴는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가중시킴으로써 내적 모순과 함께 위기의 국면으로 나타났다.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다소 경제발전의 기초를 보이는 듯도 하지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남한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력은 1948년 북한 정권의 출범 이후 대남 경쟁력을 상당 기간 확보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여 탈냉전 시기 들어 비교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절대적인 측면 모두에서 고착화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 외에 상대적으로 체제강악력 및 정치외교력과 같은 부문의 ‘견고함’을 인정하더라도, 미국 CIA의 국력지수 평가(2006)를 보면 2020년에 이르러 북한의 국력(지수)은 한국의 5%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임. 이러한 평가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반복됨.
- 이상에서와 같이 결국 국내외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도 북한의 국력은 1980년대 이후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게 존재함.
 - 즉 1970년대 중·후반까지 (1인당 GNP의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고 또한 군사비 지출이 우월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남한에게 안보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었음.
 - 잠재적인 군사력 및 전쟁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약 40배가 벌어진 현재에 있어서 과거의 불안함을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음.
 - 이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보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위협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함.

3. 북한 군사력의 평가

- 현재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음. 하나는 남북한 간 경제력에서 약 40배(2012년 현재)의 격차를 나타내는 상황에

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 열세라는 입장임.

- 전자의 경우 북한의 군사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후자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음.

-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한 간에 비대칭 전력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단,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사고하는 것은 당연한 인식임.

※ 최신 군사력 비교 방법으로 워 게임(war game)과 같은 동태적 방법이 존재하는데, 대입 변수의 복잡함과 명쾌한 검증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

-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은 남북한의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를 이른바 ‘날알 세기(bean counting)’ 하는 ‘단순 개수 비교’ 방식임.
 - 이 방법은 수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인 차이가 곧 군사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볼 때 병력과 장비의 양적 비교가 현대의 첨단전쟁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순 개수 비교는 군사력에 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주요 이유로는,
 - 첫째, 병력과 무기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 둘째, 모든 양적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 셋째, 매우 중요한 조직적 역량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
 - 넷째, 다양한 범주의 단위 부대와 무기체제가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 특히 북한의 병력 수 측정에서 과장되는 측면이 존재함.
 - 사회주의 특유의 ‘인민전쟁론’의 전쟁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우,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를 이른바

‘날알 세기(bean counting)’ 하는

‘단순 개수 비교’ 방식은

수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인

차이가 곧 군사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

한국의 해군 전력이**북한의 90%라는****한국국방연구원의****2004년 평가는****1994년을 기준으로 한****과거 평가 91%보다도****후퇴한 수치.****이는****한국형구축함건조사업****(KDX)을 통해****10년간 막대한 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 해군****전력은 오히려****후퇴한 것으로 평가**

인민군 총원은 남한과 같은 정규 군인과 다른 의미를 가짐.

- 상당수 인민군은 평시에 도로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나 농사일 등에 동원되는 ‘반군반민(半軍半民)’의 성격을 지님. 또한 대부분의 인민군 부대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거나 부대 경비를 자체 조달함.
- 사단 병력의 남북한 구성 규모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음.

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 ‘전력지수’를 사용해 군사력을 비교하는 방법임. 이는 기준지수를 정하여 각 무기의 상대적인 전력을 평가하는 방식임.
 - 이 방법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에 비해 수상전력 및 전투기전력에서만 북한을 근소하게 앞설 뿐, 전차전력·포병전력·장갑차전력·수중전력 등에서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국방부, 미 랜드연구소).
- 한국국방연구원의 ‘무기효과지수/무기의 부대가중치(WEI/WUV-III)’를 이용한 기존 전력 평가에는 전력지수의 평가 및 적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 첫째, 단순 개수 비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단순 화력(sheer firepower)’에 대한 평가에 머물고 있음. 즉, 노후되어 실제로 전투력이 거의 없는 무기라도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결과적으로 높은 전력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 둘째, 이 방법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수치를 과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과거 미 국방부는 WEI/WUV-III 방식을 통해 소련제 무기들을 다소 과대평가한 경험이 있음(예: K-1전차의 1.31, T-34에 0.97 부여).
 - 셋째, 전력지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WEI/WUV-III가 1979년에 유럽지역 무기들의 지수를 원용하여 추산한 결과의 지수라는 점. 1979년에 만들어진 무기효과 지수를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적실성에서 한계가 있음.
-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상관성에서도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한국의 해군 전력이 북한의 90%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의 2004년 평가는 1994년을 기준으로 한 과거 평가 91%보다도 후퇴한 수치임.
 - 이는 한국형구축함건조사업(KDX)을 통해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군 전력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 것임.

- 과거 연구평가 시점 이후 KDX-I과 KDX-II 사업에 따라 도입한 신형 구축함과 누락되었던 장보고급 잠수함 4척에 대한 함정 지수만 포함하더라도 한국 해군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훨씬 능가하게 됨.

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

- 각국 군사능력의 측정에 있어 군사비투자 누계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평가됨.
 - 국방비는 요소 비용의 측면에서 인적·물적·조직적 구성요소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
 - 현재 한국의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많지만 북한이 군비 증강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군사비투자 누계액에서 남한보다 앞선다는 주장이 존재함.
 -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예산 편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국방부는 “1996년 현재 북한의 누계액은 618.1억 달러인데 비해서, 한국의 누계액은 567.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누계 산정의 공정성을 차치하고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이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 현재 군사비 투자 누계액에서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론
 - 2008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이 약 67억 달러, 남한이 238억 달러로 한 해만 비교해도 170억 달러 이상이 차이가 남.
 - 한국전쟁 이후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일일이 계산한 결과 2008년까지의 남한 군사비 누계액은 3,692.8억 달러이며, 북한은 1,638.07억 달러 정도
 - 이미 5년 전에 누계 상 2,000억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후 해마다 170~180억 달러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2013년 현재 추정치: 북한이 약 2천억 달러이고 남한이 5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 또한 한국의 경우 투자비 누계 계산에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도 계상하지 않았음. 미국의 군사원조와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따르면, 군사비투자 누계에서도 1977~1981년부터 남한이 이미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존재함.
-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음.

누계 산정의 공정성을 차치하고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이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 현재 군사비 투자 누계액에서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론

2012년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리더십이 전면 교체되었고,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 시위는 2013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 매우 위협스럽게 진행

- 북한의 군사비는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 말 이래 남북한의 군사비 격차는 이미 9배에 달하고 있음(1998년 기준: 북한 13억 4,300만 달러, 남한 123억 9,800만 달러).

- 군사비 지출이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해 온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무기의 획득과 같은 전력 증강이 한계에 달해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
- 실제로 북한은 단지 장사정포(다연장 로켓포)를 늘여 대남 억지력 및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려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을 뿐, 전반적으로 전력 증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저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군수산업 가격우위론에 입각해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함.

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 동북아 안보환경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역동적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양상은 진행형임.
- 2012년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리더십이 전면 교체되었고,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 시위는 2013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 매우 위협스럽게 진행됨.
-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던 시점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서 국면전환이 연출되는 듯했으나, 북한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통보로 다시금 냉각 상태에 들어섬.
- 북한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발언과 행태를 감안하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 가능한 변화의 가능성은 진전되지 않음.
- 긍정적 전망으로는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부정적 전망으로 북한이 또다시 핵·미사일을 통한 고강도 도발을 전개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안보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작권 재연기 등의 이슈와 맞물려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이후 'G2'로 표현되는 미·중 간 전략적 관계 현실화
 -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균형, 또는 이미 일부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중국에 역전 허용(최근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 미국의 Pivot to Asia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불가피론 부각됨.
-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 → 동아태전략 → 한반도전략'의 위계와 순서에 입각해 수립됨.
 -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인 바, 현재 한·미 간 유기적 대북공조 하에 진행 중임.
 - 대북정책 원칙은 "비핵화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 수행전략은 2009년 취임 초기 '대화 중시 전략'에서 2차 핵실험 이후 '온화한 무시 전략(benign neglect)'으로 선회,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및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 외교수단은 한미동맹 하에서 국제협력 및 제도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선 외교·경제적 수단 활용, 후 군사적 압박 비(非)배제'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

-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힘.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정부가 2020년 이전에 도입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발사 전 대응을 위한 것임.
 - 한국형 미사일방어망(MD)인 KA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발사 후 조치를 위한 것임.
 - ※ 이런 전략에 따라 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위협 단계를 1단계 위협, 2단계 사용 징후, 3단계 사용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
- 순수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적의 군사위협에 대해 가용한 모든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 전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고 있음.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함*

**한국의 안보 확실성
추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대응하여 서로
자극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비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비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대비책인데,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먼저 킬 체인은 대북 선제공격(또는 예방전쟁)의 수단인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킬체인의 사슬을 끊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 비용은 우리의 그것보다 매우 낮을 것임.
 - KAMD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theater)에서 현재의 낮은 요격률을 향상할 가능성이 낮음. 결국 두 안보대응책 모두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보다 '손쉽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임.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재정악화를 불러오고 또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될 공산이 큼.
- 즉 남북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균열이 서로가 군사적 우위에 서려는 노력 속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전환되면서 서로에 대한 살상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와 함께 현재 전작권 재연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이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이 불박이 미군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안보 확실성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
 - 주한미군의 '희생(전작권 전환 연기)'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비대칭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MD체제 동참, 한국군 해외파견, 최첨단 미국 무기의 수입증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등과 같은 이슈에서 불리한 입장에 빠짐.
- 결국 한국의 안보 확실성 추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대응하여 서로 자극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 현 단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관계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는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었음.
 - 남북한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음.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 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해야 함.
- 이미 국제문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해야 할 것임.

5. 결론

- 북한의 군사위협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남한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임.
 - 남북한의 국력 차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보다 위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압도함.
 - 군비증강을 합리화시키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북한군사력 우위론이 한국사회 내에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려 있는 것이 현실.
-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현존군사력에 있어서 북한 우위론의 근거 논리로 제시되어 온 것들은 병력과 무기의 수에 대한 단순 개수 비교를 통한 북한 우위론이나 군사비 투자액의 누계액에서 북한이 앞선다는 주장, 또는 무기의 실질구 매력에서 북한이 우세하다는 주장 등 어느 것도 큰 설득력이 없음.
- 북한의 절대적 군사 우위라는 피해의식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적합한 군사대비와 외교적인 노력이 효율적으로 병합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우위론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을 과장하고 확대재생산하는 흐름은 반복됨.
-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이 국민총생산의 30%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도발의지를 우려하는 측면이 큼.
 - 군사비 지출의 절대액에 있어 가파른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절대적 군사
우위라는 피해의식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적합한 군사대비와
외교적인 노력이
효율적으로
병합될 수 있음**

**전략권 재연기는
한시적으로 한국의
안보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사·외교적
부담과 국가방위의
자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할
선택임**

-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북한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는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확장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님.
 -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함.
- 전략권 재연기는 한시적으로 한국의 안보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사·외교적 부담과 국가방위의 자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할 선택임.
 - 삼국시대의 나당연합군, 임진왜란 때의 조·명연합군의 사례에서 우리의 영웅 김유신과 이순신, 권율 등은 온전한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동맹(?)’의 허락을 받은 후 제한적인 권한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21세기에서 또다시 재현할 필요 없음.
 - 지난 60년의 성과와 함께 한미동맹 미래 60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애원하며 매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국력과 입장에 맞는 군사적 이익을 공유하고,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신념이 우선임.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 국방부, 『IMF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서울: 국방부, 1998).
-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서울: 법문사, 2008).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셀리그 해리슨, 이홍동 역, 『코리안 엔드게임』(서울: 삼인, 2003).
- 오관치, 『북한의 군사위협정도』(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함태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 Arbetman, Marina and Jacek Kugler, *Political Capacity and Economic Behavior* (Boulder: Westview Press, 1997).
- Bermudez, Jr., Joseph S. *North Korean Special Forces*, 2nd Ed.(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8).
- Dupuy, T. N., *Numbers, Predictions and War: Using History to Evaluate Combat Factors and Predict the Outcome of Battles* (Fairfax, Va.: Hero Books, 1985).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Plano, J. C. and R. Olton, *International Relations Dictionary* (California: Abc-Clio, 1982).
- Rosen, Steven J. and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77).

<논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년 국민 안보의식조사,” 『연합뉴스』, 2010년 2월 10일.
- 이영호, “북한 군사력의 해부: 위협의 정도와 수준: 남북 군사력 균형 평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IV권 제3호(1977).
- 이윤식, “2014년 한미관계 전망,” 2013년 한국평화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3년 11월 29일.
-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율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5년 개원 기념 학술회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2005년 4월 7일.
-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 Beldecos, Nick and Eric Heginbotham,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Korea,” *Breakthrough* (Spring 1995).
- Mearscheimer, John, “Assessing the Conventional Balance: The 3:1 Rule and Its Cr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3, No.4(Spring 1989).
- O’Hanlon, Micheal,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2, No.4(Spring 1998).
- Posen, Barry R., “Mea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al Bala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3(1984/85).
-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09,” in *SIPRI Fact Sheet* (March 2010).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 동맹의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월간 『통일한국』 편집장, 남북한 최초 공동출판사업 『조선향토대백과』(전 20권) 편찬팀장 등을 역임. 최근 저·역서로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공저), 『북조선탄생』(공역)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한미동맹의 방위공약 이행확실성 현황과 제고방안”,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통일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와 ‘남북공조’간 협상공간 평가”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